

“주택시장 안정, 정부 정책 우선순위”

김윤덕 국토부장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모두발언서 “총력 대응”
정부, 강남3구·용산구 포함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 의욕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이는 16일부터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

억원에서 시세에 따라 4억원, 2억원으로 추가 축소되고 1주택자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토부는 가격 폭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도 전국 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 준 격”

진보당 도당,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 비판
내란특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기로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 최한별 정책국장은 15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저버렸다”며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한 것은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출국금지탑을 대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정책국장은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도 그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원이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

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사법정의의 붕괴이자 사법부의 퇴행”으로 규정하며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사법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사법권의 특권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헌정파괴와 내란의 공범을 비호하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도민과 함께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주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 개발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북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이하 기본소득 연구회)는 15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 방안을 모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장영국 의원이 대표위원, 임종명 의원이 연구책임임을 맡았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이 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소득 사업 제도와 방향으로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공영자산 배당, 철학의 법제화 및 재원 안정화, △통합적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 4대입격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장영국 대표위원은 “이번 용역은 단순한 정책 검토를 넘어, 전북자치도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용역 보고서가 하나의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한 업체 대표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운동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법인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은 00업체 대표 A씨를 10월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 명의로 300만원을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였으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반환 받은 당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00업체 자금 300만원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후원회 회계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2항에서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교류와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 교류·실질 협력 확대 방안 모색

도의회, 중국 장쑤성 옌청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교류와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의 후속 행사로, 이번 원탁회의에는 대한민국 전북·서울·경기·충남, 일본 홋카이도·지바현, 중국 장쑤성 등 3국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문승우 의장은 기조발표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연대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경제는 실질적 성과로, 문화는 지속 가능한 교류로, 생태는 상호 책임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입법과 정책 역량

을 바탕으로 디지털경제, 재생에너지, 청년 인문교류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명연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방 차원의 산업 연대에서 비롯된다”며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러스터와 장쑤성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일본의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 친환경 에너지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가가 함께하는 실무형 경제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은 한 국가의 과제라 아니라 동아시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전북은 장쑤성과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습지 보전, 생태 연구, 인문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문화

예술은 마음을 잇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3국이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청소년 문화캠프를 정례화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북 임실 필봉농악, 장쑤성 전통 타악, 일본 와다이크를 연계한 ‘삼국 농악 페스티벌’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원탁회의에 앞서 위에다그룹, SK신에너지, 한중문화거실 등을 방문해 산업 교류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16일에는 두루미 보호구역, 시슴 보호구역, 황해산림공원 등을 방문해 생태·환경 협력 모델을 살필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난해 협력포럼이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지방의교 확대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원탁회의는 한·중·일 지방의회가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교도소 이전 법무부가 주도해야”

민주 이성운 의원, “52년된 노후 교정시설
과밀·인권피해 심각… 책임있게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올해로 52년째를 맞은 전국 다섯 번째 노후 교정시설이다. 시설 노후와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2025년 8월 기준 수용률은 124%(정원 1060명 대비 1,318명 수용), 여성 수용률은 223%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42%)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법무부에 ‘1인당 수용면적이 2.58㎡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개선할 권고를 바 있다.

이 의원은 “일반 재소자가 강력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방을 쓰는 구조가 일상화된다”며 “교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재범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2015년 사업



계획이 확정된 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예산 조정과 행정절차 미비로 늦어진 것이다.

이 의원은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면 이는 총괄부처인 법무부의 명백한 관리부실”이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법무부가 즉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도 주민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친화적 시설로 조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반영을 협의 중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성운 의원은 “전주교도소 신축은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인권보장, 재범 방지, 지역 상생을 함께 해결할 중대한 과제”라며 “법무부가 이 사업을 책임있는 자세로 직접 행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 2년 연속 대규모 손실

손실 원인은 ‘공실률 상승’

국내 연기금 운용기관들의 해외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 완주·진안·무주)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18년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 358억원, △2019년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 344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두 건의 투자 모두 최근 2년 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는 △2023년 63억원, △2024년 65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며,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도 △2023년 76억원, △2024년 77억원의 평가손실이 이어졌다.

공제회는 손실의 원인으로 ‘공실률 상승’을 꼽았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투자 당시인 2019년 2분기 5%에서 2024년 4분기 19.8%로 급증했고, 미국 오피스 빌딩의 경우



투자 당해년도에 이미 공실률이 20.1%였으며 2024년 4분기에 는 22.7%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공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투자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공제회는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경우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은 정부기관 입주가 많아 안정적이라는 자산운용사의 의견만을 듣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부분환매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라는 점이다. 즉, 매각 전까지는 자금회수가 불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회 차원의 대응수단도 제한적이다. 실제 공제회는 이번 손실에서 △관리계획서 정구, △신규 자금 배정 금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운용사 재량 사항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이만호 기자

소방대원 10명 중 8명 “피복 품질 불만족”

기능성 떨어지고 착용 불편 등 지적도… 예산 부족이 원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근무복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과 함께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 중 10명 중 8명꼴(약 80%)이 피복 품질에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현장 출동 때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방한파카·기동화)의 불만족도가 각각 82.6%, 79.5%, 78.6%로 집계돼 활동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했다.

“기능성이 떨어지고 착용이 불편하다”, “내구성이 약해 쉽게 손상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소방대원들의 불만에는 지역별 예산 격차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기준 1인당 피복 예산은 부산·제주가 25만원으로 가장 낮고, 울산은 70만원으로



가장 높아 최대 45만원의 차이가 났다.

응답자 중 36.4%는 “피복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대부분(84.3%)은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최근 6년간 소방피복 계약 현황을 보면 전북은 도내 업체가 68.9%, 대구는 지역 업체가 66.7%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만호 기자